

2021년 12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78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1년 12 (Vol.78)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1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김영현, 송유미, 최완영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1년 12 (Vol.78)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과기정통부, 보안강화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 '종 상향 허용'

6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전국 기반시설의 관리 및 성능에 관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심의·의결
해수부,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8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기재부,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해수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환경부, 옛 장항제련소 부지의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 본격화
국토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국토부, 「3080+ 주택공급방안」 선도후보지 7곳 본 지구로 지정
국토부, 맞춤형 주거복지 위한 고령자복지주택·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 서울어린이대공원에 1천 그루 식재 '미세먼지 제로 피크닉 존' 개장

부산시, 폐교활용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13년 만에 윤곽

광주시,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부지 활용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위한 예산 확보

울산시, 6개 기관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사업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 영동지역 최초 공공지식산업센터 강릉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경북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기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경남도, 2021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군 평가 결과 발표

경남도,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세종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인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준공식 개최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20

외교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서울시, 지자체 최초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

전남도, 도시계획안전점검 등 지원 위한 드론 활용 도심지 3D 구축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1년 12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활력지원과. 2021.12.09.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도시개발법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수익배분 기준 등을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재투자 -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던 것을 승인받도록 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민간참여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 -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주택 계획이 개발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검토 - 임대주택 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시행자가 공공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인하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사업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 -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주택법	- 부·지자체·공사 등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발·조성하는 용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택지에 포함

국토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1.12.15.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
주택건설 기준 완화 특례 부여	-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
정비지원 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을 정비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도시정책과. 2021.12.15.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 제시 -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 반영 -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도시개발업무지침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과기정통부, 보안강화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네트워크정책과. 2021.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물정보통신(IoT)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12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②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③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④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하여 보급하고,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 ‘중 상향 허용’

도시계획과, 2021.12.23.



도시
정책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중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의 주요 제도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중 상향을 허용하고, 중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한다.

그리고,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 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계획적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 제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완충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 완화(4층→7층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국토부, 전국 기반시설의 관리 및 성능에 관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심의·의결

시설안전과, 2021.12.21.



정부는 12월 21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21~’25)’을 심의·의결(서면)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에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에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5년 단위)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되는 것이다.

관리계획은 목표기간 내(‘21~’25)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과 함께,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최소 “C 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기반시설별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관리계획 심의·의결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안전투자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통한 관리기법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주체별 계획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환류와 연계하여 기반시설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한다.

해수부,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해양공간정책과. 2021.12.29.



국토
정책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2월 29일 발표하였다.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네 번째로 수립하는 것이며,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하였다.

제주 해양공간은 갈치, 조기, 그리고 고등어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5개소의 천연기념물, 3개소의 해양보호구역과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등이 연안을 따라 분포해 있는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인 탐라해상풍력(30MW), 제주를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 신항만 건설 등 새로운 이용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주 해양공간에 골재·광물 자원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기재부,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국유재산조정과. 2021.12.07.



기획재정부는 12월 7일,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서울 강북구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그간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2)」을 수립(‘19.4월),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국비보조비율 10%p 상향 등 지자체의 생활SOC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생활SOC시설을 신축하려고 해도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가가 기존의 노후화된 공공청사(도봉세무서)를 재건축하는 것을 계기로 지자체(서울 강북구)와 협업하여 생활SOC시설도 함께 건축하기로 하였다.

지상 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하여 그간 부족했던 민원사무 공간 등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해수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항만투자협력과. 2021.12.22.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22.9만㎡, 약 7만평)에 2025년까지 약 580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부지의 약 43%인 9.8만㎡(약 3만평)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며, 그 외의 부지(13.1만㎡, 약 4만평)는 국가로 귀속된다.

항만배후단지 부지가 조성되고, 복합물류시설 등 관련 시설이 준공되는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인근 연안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위치 및 토지이용계획도(변경)]



환경부, 옛 장항제련소 부지의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 본격화

자연생태정책과. 2021.12.22.



환경부는 충청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하여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례군 곰 보호시설 외에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지 내에도 추진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부지도 함께 점검했다.

국토부, 철도 유허부지를 활용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철도운영과. 2021.12.23.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허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허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철도 유허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한 대중교통 편리성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주거 공간,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창업) 등을 복합 개발한 레일 스테이(청년임대주택)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변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3080+ 주택공급방안」 선도후보지 7곳 본 지구로 지정

도심공공주택공급총괄과. 2021.12.29.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12월 31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 발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9.21 시행)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 시행 후 1·2차 예정지구 9곳을 지정하였으며, 이 중 증산4 구역 등 7곳을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징]

구분	주요 내용
공공참여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 -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
토지주·세입자 내몰림 방지	-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하며,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
민간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 보장	- 주민 동의(토지주 2/3&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본 지구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 -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

국토부, 맞춤형 주거복지 위한 고령자복지주택·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정책과. 2021.12.30.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21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총 2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21년 현재 2,260호를 공급 완료하였고, ‘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제안서를 받아,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상반기 강원 인제군 등 11곳(총 783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충북 보은군(80호), 전북 장수군(100호), 전남 완도군(103호), 경남 합천군(116호) 총 4곳(399호)을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4년부터 현재까지 13개 지구에 1,540호가 준공되어 중소도시의 지역생활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21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마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을 받아,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사업비 분담률 협의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강원 정선군 여량면(40호) 및 임계면(70호)을 선정했다.

서울시, 서울어린이대공원에 1천 그루 식재 '미세먼지 제로 피크닉 존' 개장

시설공단. 2021.12.23.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나무 1천그루로 조성한 피크닉 공간, 「미세먼지 제로 피크닉존」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미세먼지 제로 피크닉 존은 롯데홈쇼핑과 환경재단이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도심 숲 조성 프로젝트 <숨;편한 포레스트>를 통해 기부·조성되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미세먼지 제로 피크닉존은 1,000m² 규모로 기존 상상마을(정크아트 테마정원)의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조성했다. 피크닉 공간 외곽을 따라 수목을 식재하고, 안쪽에 평장과 피크닉 벤치를 설치해 산책과 휴식이 가능토록 했다.

부산시, 폐교활용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정책과. 2021.12.30.



부산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 환경교육 거점시설 조성에 나선다.

부산시는 30일, 환경부,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구와 함께 「부산환경 체험교육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체험교육관은 일명 '에코스쿨'로 기후와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 환경교육의 거점시설이다.

20년 9월, 환경부의 「폐교 활용 국가환경체험교육관 조성사업」 공모에 학령기 아동 감소로 지난해 3월 폐교한 (구)반여초등학교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건축물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 기술이 활용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도 접목된다. 시는 에코스쿨을 녹색 건축물로 조성하여 탄소중립 모델로 삼을 계획이다.

인천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13년 만에 윤곽

도시개발과. 2021.12.10.



인천광역시는 검단신도시 1단계 준공식을 12월 10일 검단신도시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면적이 여의도의 약 4배에 달하는 검단신도시의 개발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 해 말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 3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3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검단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착공됐다. 올해 6월부터 6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를 시작했으며 공동주택 준공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17개의 크고 작은 공원도 조성했으며 아라동 행정복지센터가 6월 1일 개청했다. 이밖에도 주민편의 공공시설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과 광역도로 개통 등도 계획·추진 중이다.

광주시,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부지 활용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위한 예산 확보

도시계획과. 2021.12.13.



광주광역시는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부지 활용을 위해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10억원을 2022년도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3일 대시민 현장보고회를 통해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3대원칙 및 활용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무등산 난개발을 막아내고 공익적 가치를 높여 광주의 진산, 무등산을 지켜내기 위한 공유화 3대원칙은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조성, 무등산권 생태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구심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이다.

민관정위원회 운영,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양파크호텔 부지 및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무등산 생태시민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신양파크호텔 기존 건축물은 보존하되 누구나 머무를 수 있도록 생태·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무등산 생태시민호텔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울산시, 6개 기관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사업 업무협약’ 체결

해양항만수산과. 2021.12.16.



울산시가 울주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대학교 등과 함께 ‘울산 해저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해양수산부의 관련 사업 공모에 참여기로 했다.

울산시는 12월 16일 울주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서생면 어촌계장협의회, 울주군 어선어업협의회 등 6개 공공기관·대학·단체와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초 ‘해저공간 창출 · 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6개 공공기관·대학·단체는 해저공간 설계, 시공 원천 기술 개발, 해저공간 운영, 유지관리 원천기술 개발, 해저공간 구조 시험장(테스트베드) 설치 및 실증, 관련 연구 기반(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인적 교류, 해양과학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해저공간 창출·활용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시험장(테스트베드) 지역 산업 연계활용 등의 사업에서 적극 협력한다.

한편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해저 거주를 위한 설계 및 시공기술,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 해저공간 구조 시험장(테스트베드) 설치 및 검증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사업’에는 건설·중공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 및 울산시, 울주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울산연구원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여 민·관·학·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영동지역 최초 공공지식산업센터 강릉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투자유치과. 2021.12.16.



건축
정책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로 강릉시가 선정돼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아 강릉시와 함께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에 의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원주, 춘천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되었다.

내년에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우선 지원받아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1층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이, 2층~5층에는 총 60여개 의 기업이 입주하여 3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 된다.

경북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기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친환경농업과. 2021.12.15.



도시
정책

경상북도는 15일 국내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기능을 할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사업비 1,606억원을 들여 2019년 12월에 착공했으며 스마트농업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및 농업혁신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 핵심시설로는 청년창업 보육시설(교육형온실, 경영형온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온실 및 지원센터로 구성됐다.

경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더불어 안동 노지스마트팜, 포항·성주 스마트원예단지를 거점으로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도내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통합관리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청년농의 정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비 절감형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하고,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관 협력으로 2030년까지 도내 시설원에 스마트팜 보급률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도, 2021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군 평가 결과 발표

산림휴양과. 2021.12.06.

완료

도시
정책

환경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군 평가 결과 통영시가 최우수를 차지했고 양산시·합천군이 우수를 진주시·창녕군이 장려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 수립된 평가 계획에 따라 자체예산 확보, 나무심기 실적, 도시숲·가로수 관리, 녹지공간 활용, 나무은행 운영, 푸른경남상 발굴 등 예산, 실적, 참여 분야에 대해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최우수는 시군을 통합하여 최고 득점 기관에 주어진다. 선정된 기관에는 12월 말 기관표창, 유공공무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2021년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698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내 694,655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체계적인 도시숲·가로수 관리를 위해 연초 관리계획 수립 및 용역 90건을 시행하고 및 22개 직영단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녹지공간을 활용한 167회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나무은행 운영을 통한 자원재활용으로 8억 원에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푸른경남 조성에 기여한 11개 사례를 발굴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우수: 도시바람길숲 - 양산시 물금신도시]

경남도,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물류공항철도과. 2021.12.28.

진행

도시
정책

건축
정책

경상남도는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진해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의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부터 1단계 9선석에 대한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7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2032년에는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이 개장하게 된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하여 총 21선석의 대규모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다.

진해신항이 최종 완공되면 부산항 신항과 더불어 2040년 기준 4,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3위권의 세계 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항만 총 60선석 중 36선석을 경남도가 확보하게 되어 항만 기능이 경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와 연계한 세계적인 트라이포트 물류허브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해신항 조감도]

세종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인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준공식 개최

도시재생과. 2021.12.09.

완료

건축
정책

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조치원을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준공식을 가졌다. 조치원을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원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옛 목욕탕인 청자장은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완성한 첫 번째 거점시설로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청년, 예술가를 위한 문화 활동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층별 현황은 1층 북카페, 2층 창작공작소, 3층 창작스튜디오·게스트하우스, 4층 공동 휴게공간과 옥상정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운영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운영자가 3년간 청자장을 맡게 된다. 그 기간 중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상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에 참여해 주민 스스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향후 자생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자장 준공식]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완료

진행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외교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기획조정실. 2021.12.24.

완료

건축
정책

환경

외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며 녹색건축인증(G-SEED)을 취득할 계획으로,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부·환경부와 협력하여 12월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이는 외교부와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성과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하여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

도시기반시설본부. 2021.12.21.

완료

건축
정책

안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OSHA-M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조건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하여 개발한 최신 안전보건경영체계다.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으로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Plan), 지원(Support), 실행(Do), 점검(Check), 개선(Action)의 순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공사 추진!’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매뉴얼, 절차서(17종), 지침서(5종)를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각 공사장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위험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전문가 동반 안전점검 실시하고,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신규 공사장 안전기술 지도, 강교가설,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시 사전 전문가 점검 실시, 위험공종작업 사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관리지침 제공, 비상사태 대비 모의훈련 시행(해빙기, 동절기, 장마철), 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수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 도시계획안전점검 등 지원 위한 드론 활용 도심지 3D 구축

토지관리과. 2021.12.09.



도시
정책

전라남도는 최신 드론을 활용해 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의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는 정사영상 제작 형태로 토지 이용 현황 파악, 연도별 변화 모습 기록 등 주로 2차원 공간정보로 활용했다.

3차원 공간정보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과정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 및 비용의 최적화 방법을 제공하는 스마트 기술이다. 적용 분야가 점차 확대 추세다.

전남도는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해 2022년부터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를 직접 촬영해 항공영상 기반 3D 입체영상 변환 및 보안 처리를 거쳐 3차원 공간정보를 시범 구축한다. 구축한 DB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3D 입체영상 데이터베이스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 자체 3차원 데이터 구축으로 토목·건축·도시계획·안전점검 등 다양한 분야와 매칭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3차원 설계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 분석 및 미래 예측으로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